

# 무안 '통합이전 보상'…1조+α 지원 패키지 가시화

광주·정부 보조 등 1조원 규모 자금지원 약속  
정부·도, 농업AX·에너지·항공산업 기반 구축  
호남지방공항청 신설…무안공항 거점공항 육성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될 무안군에 국가와 광주시, 전남도의 지원 내용과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넘게 담보 상대였던 이전 논의가 대통령실 주도의 6자 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무안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협의체(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는 17일 광주도 시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에 대한 정부와 광주시·전남도의 지원 방향이 명시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안군에 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전남도와 정부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에너지 산업,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안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지정해 산업 집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정부 차원의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 신설을 추진하고,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무안군이 통합이전 수용의 전제로 제시해 온 핵심 조건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안군이 요구해 온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국가 차원의 혁신 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로 견의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무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무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이 요구해 온 ‘혁기적인 인센티브’는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외에도 패키지

형태로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산업·인프라 지원을 포함하면 약 3000여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한 첨단 농업 기반 조성과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계획이 제시되면서, 무안의 산업 구조 전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총사업비 450억원), 농업 AX 실증센터 구축(400억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300억원) 등 총 1150억원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스마트 농기계, 드론, 자율주행 장비, 스마트팜 기자재 등 첨단 농업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업 AX 실증센터는 스마트 농기계와 AI 솔루션, 자동화 장비 등을 실제 농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시연할 수 있는 실증형 기반시설로 구축된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는 항공 MRO 산업을 비롯해 항공·물류·주거·교육 기능이 결합된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조성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업과 승촌교 제거 및 SOC 관련 예산도 무안 발전을 위한 패키지 지원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로 견의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무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무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안규백 국방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대통령 결심에 판이 바뀌었다…군공항 이전 합의 ‘결실’

**▲ 대통령 정부 주도 선언 후 6자 TF 중재 성과 눈길  
무안 인센티브 패키지 수용…이전 대상지 확정 국면**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혁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이다. 논의가 다시 교착

군이 수용하면서 합의문 발표까지 이어졌다.

광주 군공항은 1949년 창설 이후 도심

팽창에 따라 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공항 동시에 이전을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이 장기화됐다.

김 정책실장 발언 2주 만인 11월19일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사전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고, 조속히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중재안에는 무안군이 내건 3대 조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고, 국가산단 조성 등 ‘패키지 지원’ 방식의 인센티브를 무안

군이 수용하면서 합의문 발표까지 이어졌다.

광주 군공항은 1949년 창설 이후 도심

팽창에 따라 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공항 동시에 이전을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이 장기화됐다.

여기서 무안 지역의 반대 여론까지 겹치면서, 논의는 수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자체 이해관계가 얹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해법이 나온 것 같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실용주의가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Byself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 Q